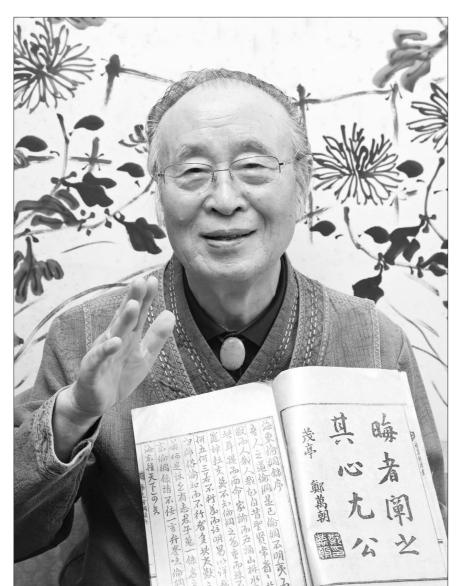
"친일 유림, 충·효·열 강조하며 흔적 지우기"



심정섭씨가 30일 친일 유림단체 '대성문학원'의 도유사이자 대한제국 육군 보병 참위(소위) 정인 찬의 저서 '해동윤강록'을 공개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심정섭 명예관장, 대성문학원 집필 '해동윤강록' 공개 애국지사 등으로 이미지 세탁…쌀 한 가마니에 강매도

친일 유림들이 일제의 조선 식민화에 적극 동조했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충・효 •열을 내세운 '해동윤강록'을 집필, 애국 지사 이미지로 포장하려 했던 정황이 사 때 조선의 기개를 드높인 3학자 홍익한,

30일 민족문제연구소 지도위원이자 식 민지역사박물관 명예관장인 심정섭 사백 (82·광주 북구)은 친일 유림단체 '대성문 학원'의 도유사이자 대한제국 육군 보병 참위(소위) 정인찬의 저서 '해동윤강록' 을 공개했다.

장본(한문으로 기록된 옛 서적)으로 분 개됐다. 량은 81쪽이다. 해동윤강록은 '삼강오륜 (三綱五倫·유교에서 지켜야 할 세 가지 의 축간, 서문, 발문에는 반민족 행위에 강령과 다섯 가지 인간 관계)에 특출한 앞장선 친일파의 흔적들이 가득했다. 해 업적을 남긴 사실을 기록한 책'이다.

실제로 '해동윤강록'은 △충의유현편 (54명) △효행편(366명)△효열부편 (374명) △유현편(16명) △유림편 (425명) 등으로 구성됐는데, 총 수록된 인원은 1235명에 달한다.

충의유연편에는 고려의 충신(고려3은) 이자 대유학자인 이색, 정몽주, 길재가 나 온다. 육진을 개척한 김종서, 성삼문 등 사

육신과 김시습 등 생육신이 등재됐다.

임진왜란 구국 영웅인 이순신과 권율, 의병장 김천일, 조헌을 비롯해 병자호라 윤집, 오달제도 포함됐다.

효행에 등재된 효자 중에는 고려 충신 신승겸, 정몽주, 의병장 고경명, 조선조의 청백리 박수량의 후손이 등장한다.

됐다. 아버지가 병으로 위독하자 자신의 넓적다리 살을 베어 구어 드리고, 손가락 크기는 가로 18cm, 세로 29cm이고, 한 을 잘라 피를 먹인 효열부 천안전씨가 소

> 동윤강록 발기인에 등재된 친일 인사는 1가마니에 강매한 정황도 파악됐다. 228명에 달했다.

학원 대제학 정만조가 쓰고, 서문은 저자 정인찬과 발문은 진사 유진만이 썼다.

서 김종한, 판서 박기영, 판서 민병한, 판 서 이재헌, 참판 윤영구, 찬판 이범석 등 대한제국 고관대작이 즐비했다.

이중 김종한, 박기양은 일제로부터 남 작을 받았고, 윤영구는 조선사편수회 위 원이다. 이들 모두 친일인명사전에 등재

대동문학원 원장 판서 민병한은 1907 년 조직된 친일유림단체 대동학회와 1909년 조직된 공자교회의 발기인이다. 대동문학원 부원장 승지 이범석은 1910 년 3월 일진회의 합방청원서에 동조해 결 성된 국민협성동지회의 간부이다.

대동문학원의 고문은 총 3명으로 확인 된다. 이중 이재현은 홍문관 교리로, 동학 괴수 섬멸 상소를 올린 뒤 판서를 역임했 효열편에는 효부와 열부의 사적이 등재 다. 송영대는 참판을 역임하고 친일유림 단체인 조선유교회와 대동학회의 간부를

이들은 친일유림으로 '해동윤강록'의 간행 발기인이다. 친일에 앞장섰던 유림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해동윤강록 층들이 조직적 '자기세탁' 행위를 벌인 사 실이 문서로 증명된 것이다.

애국지사 후손들에게 해동윤강록을 쌀

심정섭 명예관장은 "삼강오륜을 위배 축간 휘호는 판서 윤용구와 합방 후 경 한 강상죄인(綱常罪人) 인 친일 유림들이 충과 효, 열을 논하는 모습이 가소롭다" 면서 "일제강점기는 물론 광복 이후까지 발기인을 확인한 결과 판서 민경호, 판 친일 유림들과 그 후손까지 지위가 높은 벼슬자리를 꿰찼고, 금수강산을 호령했 다"고 질타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이민 여성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 나눔' 28일 광주 서구 양동 새마을부녀회 공동체 활동공간에서 열린 '이민 여성과 함께하는 사 랑의 김장 나눔' 행사에 참석한 배창숙 광주 서구새마을회장과 회원들, YSMU 학생 및 이민 여성들이 지역 소외가정 500세대에 전달할 1500포기의 사랑의 김장 김치를 담그고 있다. 이날 담근 사랑의 김장김치는 서광주농협이 후원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

"작은 불씨가 참사로"…부주의 화재 비상

광주·전남 매년 1300건 이상 발생···사망·부상 잇따라

소방당국이 연중 강도 높은 화재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는 A씨(29)가 숨졌다. 것으로 나타났다.

주지역 부주의로 인한 회재 시고는 2020 년 499건, 2021년 370건, 2022년 375건, 2023년 326건, 2024년 290건 등으로 파 악됐다.

같은 기간 인명 피해는 사망 0명·부상 15명, 사망 2명·부상 13명, 사망 1명·부 상 16명, 사망 1명·부상 11명, 사망 2명· 부상 13명 등에 달한다.

전남은 논・밭과 산간 지역이 많은 지리 적 특성까지 맞물리면서 훨씬 많은 피해 가 발생했다. 전남지역 부주의 화재사고 는 2020년 1384건, 2021년 1361건, 2022 년 1802건, 2023년 1386건, 2024년 1382 건으로 매년 1300건 이상이다. 이는 전남 화재의 56%에 달한다.

같은 기간 인명 피해도 사망 6명·부상 37명, 사망 6명·부상 40명, 사망 8명·부 상 39명, 사망 8명·부상 43명, 사망 2명· 부상 33명 등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도 인화물질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로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26일 오후 10시35분 전남 고흥군

30일 광주·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광 투입해 1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지만, 컨 테이너(100㎡) 한 동이 전소돼 616만원 의 재산 피해가 났다. A씨는 출입구 부근 에서 담뱃불로 화재가 커지는 바람에 빠 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 국은 담배꽁초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높 게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지난 4월10일에는 화순군 도곡면 신덕 리의 한 양봉장에서 불이 나 81세 남성 B 씨가 목숨을 잃었다. 화재는 양봉 작업을 하던 중 훈연기 불티가 주변 잔디로 옮겨 붙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B씨는 인근 병 원으로 옮겨졌지만 회복하지 못했다.

소방당국은 "담배꽁초 방치, 불씨 관리 소홀, 야외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건조한 계절에는 특히 작은 불씨라도 바로 확인 하고 완전히 꺼졌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엄재용 인턴기자 djawodyd0316@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광주 직업계고 신입생 경쟁률 급증…'정원 초과'

12개 고교 평균 1.32대 1 기록

광주지역 직업계고교 신입생 경쟁률이 현상이 크게 완화된 모습이다. 해마다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주목된다. 3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마 감된 2026학년도 직업계고 신입생 원서 접수 결과, 관내 12개 고교 1794명 모집 에 2375명이 지원해 평균 1.32대 1의 경 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2024학년도 1.12 가 이어졌다.

대 1, 2025학년도 1.27대 1에 이어 2년 연 속으로 경쟁률이 상승한 수치다. 12개 학 다. 2024학년도에는 신입생 지원율이 정 교 모두 정원을 초과하며 직업계고 기피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광주 대 1, 2026학년도 1.18대 1로 반등했다. 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로 2.18대 1을 나 타냈다. 이어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 고 1.65대 1 △광주자연과학고 1.59대 1 △전남공업고 1.44대 1 순으로 지원 열기

특히 광주공고는 두드러진 변화를 보였 원의 62.3%에 불과했지만, 광주형 마이 스터고로 지정된 이후 2025학년도 1.15

송원여상은 내년부터 교명을 '송원미래 인재고등학교'로 바꾸고 철도전기괴를 신 설했는데, 해당 학과에만 정원의 136%가 몰리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3.⊤		0~13	
	목포		9~11	
	여수	**	10~14	
NHIPIN	순첩	**	7~14	
확이하네요!	구례	**	6~13	
광주	해남		8~13	
	완도		9~14	
	흑산도	***	10~12	
전남	고흥	**	8~14	
•	진도	The state of the s	8~12	
목포	밀물 (고)	10:35	10:35 / 22:50	
	설물 (저)	03:36	03:36 / 16:12	
	밀물 (고)	05:48	/ 18:02	

유세원 폭행 60대 벌금형

<mark>썰물(제)</mark> 11:43/--:--

○…21대 대선 기간 '확성기 소리 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유세원을 폭행한 6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 법 제12형사부 박재성 재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

A씨는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올해 5월30일 광주 서구 한 횡단보도에서 한 대 선 후보 선거운동원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

A씨는 횡단보도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유세 중이던 선거운동원 들에게 "너무 시끄럽다"며 시비 를 걸었고, 이 과정에서 폭력을 휘둘렀다고.

이로 인해 선거운동원은 전치 2주의 병원 치료를 받아.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선거에 개입하려던 목적은 아니 고 확성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서 그랬다"며 선처를 호소.

재판부는 "자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잠깐인데 뭘"···장애인·전기차 주차구역 '얌체족' 급증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폭증…불법주차 年 1만건 적발 전기차충전구역 위반도 최고치···"인식·시스템 개선을"

광주 도심 곳곳에 설치된 장애인•전기 차 등 지정 주차구역이 '불법・얌체 주차' 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전용 주차표지를 부정 사용하 는 사례가 해마다 급증하고, 전기차 충전 구역을 일반 차량이 점령하는 일도 일상 화되면서 지정 구역이 사실상 '무법지 대'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장애 인자동차표지 부정 사용 적발은 2020년 57건에서 2023년 144건, 2024년 260건 으로 뛰었다. 올해는 10월 기준 464건으 로 2020년에 비해 8배 폭증했다.

과태료 부과액도 크게 늘었다. 2020년 8784만원에서 2023년 2억1570만원, 2024년 3억9597만원으로 불어났다. 올 해는 10월까지 집계된 과태료만 6억 주차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면 각각 10만

4469만원으로, 이미 지난해의 1.6배를 넘어섰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는 '연 1만 건'으로 고착화 됐다.

2020년 1만9643건, 2021년 1만3976 건, 2022년 1만3955건, 2023년 1만5264 건, 2024년 1만5294건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 10월까지 1만39건이 적발됐다.

부과된 과태료 역시 같은 기간 17억 9202만원, 12억8816만원, 12억6841만 원, 14억810만원, 14억611만원, 8억 5866만원 등에 달한다.

현행법상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원,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청구된다.

지난 2022년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 로 설치가 의무화된 전기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얌체족들도 크게 늘었다.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건수는 2022년 1997건에서 2023년 5513건, 2024년 6354건으로 치솟았고, 올해는 10월까지 6670건으로 이미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 하거나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충전시간 초과 주차(급 속 1시간, 완속 14시간)나 충전을 하지



않고 주차를 하는 행위 역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전구역이나 시설 을 훼손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잠깐이면 괜찮 다'는 안일한 생각과 공동주택 주치공간

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인력과 단속시스템이 따라주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민의식 •도시구조 개선 등이 동반 추진 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유승주 광주보건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과태료만 올려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며 "주차내역 자동 확인, 충전• 장애인구역 실시간 모니터링 등 시스템 적 개편 없이 단속만 외치는 건 행정의 책임 회피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주택 주차난 해결 없이 불법 은 계속될 것"이라며 도시구조 개선도 함 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재용 인턴기자 djawodyd0316@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